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6년 7월

올 연구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부서별로 중간검토회의 개최해 연구 보완



부서별로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자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중간검토회의를 가졌다.

연구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원은 6월 말부터 중간검토회의를 시작하여 7월 중순에 모두 마쳤다.

우리 연구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과제를 제안 받아 심의하여 과제를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1월과 2월에 연구설계를 하여 3월에 연구설계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간다.

연구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연구 관련 검토회의를 열어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6월과 7월에 부서 자체적으로 내외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연구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나 연구인력 등 보완에 대한 의견까지 청취하여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12월말까지 보고서를 발간할 목표를 세우고, 9월과 10월에 결과세미나를 개최해 11월말까지 최

종보고서 정밀 검토를 마칠 계획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연구부서별로 실시한 중간검토회의의 기본연구과제는 농산업연구센터 6과제, 농촌발전연구센터 5과제, 농업구조연구센터 4과제, 국제농업연구센터 4과제, 농업관측정보센터 1과제, 산림정책연구실 1과제 등 총 21과제이다.

연구원 고객 “연구과제 선정 적절”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연구원은 고객최우선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정책고객과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사업 만족도 조사에는 204명의 정책고객이 응답했다. 고객들은 ‘연구과제 선정의 적절성’ (3.8점)

과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 (3.7점), ‘농업정책 기여도’ (3.6점) 등 연구원의 기본 임무와 기능에 대해 5점 만점에 3.6점 이상으로 평가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온라인 포럼 운영’ (3.2점)과 ‘고객과의 의사소통’ (3.3점) 등 부가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연구원 고객 10명중 8명 (79.5%)은 현장연구의 강화와 고객관계 혁신 등을 골자로 한 향후 3년간의 경영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평가했으며, 과반수 이상(61.8%)은 연구원의 역량이 3년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에는 687명이 응답했다. ‘홈페이지 다운로드 속도’ (3.8점)와 ‘이용 편리성’ (3.6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링크서비스’ (3.4점)와 ‘서비스 다양성’ (3.4점) 등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객들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농업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연구원이 농업분야의 비전제시와 현장중심연구에 매진해 달라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220건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여 연구원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연구원은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연구사업에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남아시아 공무원 대상 농촌개발 연수 실시 경제발전 과정과 새마을운동 강의



서남아시아 4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농촌개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서남아시아 4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연수를 지난 7월 20일에 시작해 8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는 스리랑카를 비롯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의 농촌개발 담당 공무원 및 비정부조직(NGO)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과 농촌발전, 새마을운동의 발전 배경과 추진 전략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각국의 농촌개발 전략구축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연수기간 중에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가져 우리나라의 농촌 마을개발 방식을 실제 해당 국가에 적용해 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한국농촌공사, 농촌진흥청, 천안농협, 이천 내촌리 새마을마을, 홍성 문당리 친환경마을 등 농업관련기관과 농촌마을을 돌아본다.

농업인 학습, 쌀 주제로 농경토론회

지난 7월 25일 중회의실에서 '농업인의 학습과 영농실천'이란 제목으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했다.

마상진 전문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다양한 농업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마 전문연구원은 "이를 위해 교육훈련 패러다임에서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농업인의 영농실천 독려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열려 농업인의 학습특성과 학습결과를 영농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7월 31일 중회의실에서 농경토론회가 열려 '미국·일본의 쌀 관련 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쌀 관련 정책을 토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쌀 정책과 비교하며 도입 가능한 정책과 개선할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한 뒤 토론했다.

7월에 관측회의 9차례 열어

농업관측정보센터 과채·과일관측팀은 7월 5일 연구원에서 8월호 월보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과일관측팀은 7월 25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7월 26일은 채소관측팀은 연구원에서, 과일관측팀은 원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월보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축산관측팀은 7월 12일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관측(육계) 8월호 발간을 위한 지역자문회의를 갖고, 21일은 연구원에서 중앙자문회의를 가졌다.

산림정책연구실은 7월 10일 연구원에서 밤 관측보 발간을 위한 임업관측중앙자문회의를 갖고, 7월 12일은 문경시 산림조합에서 표고 관측보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농촌공간 2020-농촌의 미래 모습' 전문가 워크숍



'농촌공간 2020-농촌의 미래 모습' 전문가 워크숍을 7월 5일 연구원에서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7월 5일 중회의실에서 '농촌공간 2020-농촌의 미래 모습'이란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우리 연구원 박시현 농촌발전연구센터장 등 5명의 연구진과 외부 12명의 전문가 등 17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2020년 농촌공간에 영향을 미칠 우리 사회의 메가트렌드에 대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촌공간 2020 연구의

주요이슈는 무엇이고 이 이슈에 대한 답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연구진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나눈 것을 '농촌공간 2020-농촌의 미래 모습'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장개방의 핵심 쟁점으로 다가가는 한·미 FTA 협상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지난 6월과 7월 연이어 개최되었던 협상은 8월 휴가철을 건너뛰고 9월에 다시 열리게 된다. 6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된 다섯 차례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달 정도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8월중에 양허안을 교환하게 되어 있어 협상단은 상대국 양허안 분석 및 협상 전략 수립으로 한기하게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싸움의 1, 2차 협상

6월에 열린 1차 협상은 양국이 그동안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보여 온 각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단계였다. 예상에서 크게 빗나간 부분이 없을 정도로 서로의 공통적인 견해는 물론 의견 차이가 확연히 들어났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된 농업분과와 동식물검역 분과는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할 정도로 큰 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2차 협상에서 일부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는 심한 기싸움을 벌였다. 의약품과 관련된 문제로 일부 분과의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매스컴을 이용한 협상장 밖에서의 공세 등 입지 강화를 위한 기싸움이 절정에 달한 것이다. 이러한 기싸움에 의한 거품은 3차 협상부터 점차 제거되는 과정을 겪게 될 전망이다.

두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나타난 기선잡기용 거품은 상품양허 협상을 거치며 점차 제거되고 실질적인 시장개방 내용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한-미 양국은 8월 중에 상품양허안(시장개방계획서)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9월 4일부터 3차 협상에 들어간다. 한-미 FTA 협상이 상품별 시장개방이라는 가장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8월에 교환될 상품양허안은 양국이 각자의 시장개방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며, 시

장개방 협상에 기초가 될 것이다.

양허 틀이란 관세의 즉시철폐, 3년철폐, 철폐 예외 등 관세와 관련된 것은 물론 수입쿼터 등 시장개방 내용을 유형화한 것이다. 상품 양허안 또는 상품별 시장개방 일정은 먼저 양허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양허할 상품을 담는 방법도 있고 양허 틀 없이 작성할 수도 있다. 2차 협상에서 합의된 공산품 분야 양허 틀은 관세의 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 기타 등 다섯 가지이다.

이렇게 틀이 마련되면 이 틀 속에 시장개방 계획을 분류해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양허안 작성과 협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산물 분야는 2차 협상에서 양허 틀을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개방 계획서가 작성, 교환될 예정이다.

거품이 제거될 3, 4차 협상

농산물 양허 틀은 공산품에 비해 복잡하고 시장개방 기간도 길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이 최근에 맺은 중미 6개국과의 FTA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하고 있다. 그밖에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5년, 호주와의 FTA 18년, 페루와의 FTA 17년 등이다.

또한 양국의 양허 틀이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미국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에서 자국은 아홉 가지의 영허 틀을 설정하였으나 상대국에 대하여는 열두 가지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페루 FTA에서도 미국은 여덟 가지, 페루는 열여섯 가지 양허 틀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 농산물 양허 틀은 공산품과의 차별화는 물론 국별 차별화도 가능하며, 이러한 다양한 양허 전략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8월에 교환될 양허안은 양국 모두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시장개방 요구는 매우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3차 협상은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는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계획 합의 및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는 품목에 대한 의견 절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빅딜이 요구될 5차 협상

문제는 시장개방 수준에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품목과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초민감 품목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4차 및 5차 협상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민감 품목에 대한 협상은 올해 마지막 협상인 5차 협상에서 빅딜 형태로 결론을 짓고자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차 협상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시장개방 윤곽이 들어나고 마지막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나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인가도 결정될 것이다.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수준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민감 품목을 가지고 있다면 농업부문 내에서의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여력은 크기 때문에 농업부문 내에서의 타협 가능성은 낮다.

결국 농산물은 공산품 또는 섬유 등 다른 분야와의 빅딜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빅딜이 5차 협상에서 잘 이루어지면 2007년에 일부 정지작업 또는 정리 단계를 거쳐 협상은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R**



‘재해보험’을 재해대책의 버팀목으로

최 경 환 연구위원

강원도 수해 현장을 돌아보니 참으로 처참했다. 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을 앗아간 국지성 집중호우의 위력을 실감하며 너무 마음이 아팠다. 최근들어 기상이 변으로 해마다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의 태풍(‘루사’와 ‘매미’), 2004년과 2005년의 폭설, 그리고 올해의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그러하다.

세계 각국도 각종 재해로 난리법석

이러한 현상은 국외에서도 비슷하다. 지난해 미국에서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올해만 해도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심한 물난리를 겪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지진피해를 겪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홍수, 산불, 무더위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의 원인은 그동안 세계 각국이 추구해온 경제발전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 전지구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없다면 최근의 기상이변은 이번이 아닌 연례 행사가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급선무는 최근의 재해 발생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의 각종 재해예방 대책들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불비(不備)한 부분을 찾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업분야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

재해대비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일회성으로 그쳐서도 안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해예방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자연재해에 가장 민감하면서 취약한

분야가 농업분야이다. 자연조건이 농업 생산에 순기능을 하면 수확철에 풍년을 구가할 수 있다.

반대로 자연조건이 농업생산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면 재해가 된다. 농업재해는 인명에서부터 농작물, 가축, 주택 및 농업용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넓고 다양하다. 농업이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 농업재해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관건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과정에서 과로를 피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최근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안전영농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음에는 농작물 생산과 가축 사육시에 발생 가능한 재해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와 생산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늘 재해에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관찰, 점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전 예방과 함께 사후 대비를

철저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후복구대책의 구비가 필요하다. 사후경제대책으로는 국가차원의 사후대책과 개인 차원의 사후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국가적 사후경제대책으로는 재해지원과 재해보험이 있으며, 개인차원에서는 평소에 재해에 대비하여 저축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국가의 재해지원은 그동안 많은 재정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농업인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농업인 개개인

이 평소에 재해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농업인들이 불의의 재해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은 농업 관련 각종 재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농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보험들이 계속 개발·확대되고 있다. 농업인들의 농작업사고 및 농기계사고에 대비한 농업인재해공제과 농작물 손실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 그리고 가축의 질병이나 폐사 등에 대비한 가축공제(보험), 주택, 축사 및 하우스의 파손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등이 그것들이다.

농업재해보험, 중요한 재해대비수단

이들 재해보험들은 시작인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내용도 완벽하지는 않다. 부족하고 불충분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보험제도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농업인들의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번 수해현장을 보면서 아쉬운대로 이런 보험들이라도 활용하였더라면 하는 점과 기존의 보험들을 보다 충실하게 하면서 다양한 보험의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밭의 곡식은 농부(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농업관련 보험들이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해보험은 재해대책의 만능이 아니고 유일한 대안도 아니며 대비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늘 조심하고 예방하여 재해를 입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재해예방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R**

DDA 협상 중단 의 원인과 시사점

임 송 수 연구위원

7월 23~24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6(EU, 미국,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DDA 협상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난공불락의 미국 농업보조

G6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미국이 농업 보조 분야에서 추가 감축안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2005년 10월에 미국은 농업보조를 220억 달러로 감축할 것으로 제시했으나, 회원국들은 제안된 보조규모가 2005년의 집행액(177억 달러)보다 높다고 지적하면서 더 많은 감축을 요구했다(아래 그림 참조).

비록 EU가 요구하는 150억 달러 수준을 맞추진 못해도 미국은 170~180억 달러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 일부 관측이 있었지만, 미국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목표가격아래 지불되는 가격보전직불(CCP)을 블루박스(생산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보조)로 전환하면 미국이 최소허용보조(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보조)를 더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도 빛나갔다.

반면에 미국은 시장접근 곧 관세감축 분야에서 충분히 양보하지 않은 EU와 개도국을 비난했다. EU는 지난 10월에 39% 관세 감축률을 제시했으나, 최근에는 개도국 그룹 G20이 제안한 감축률 54%에 맞춰 50% 선까지 감축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보다 더 큰 폭의 관세 감축이 있어야 무역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주장하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개도국을 대표한 인도는 전체 농산물의 20%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량이 5%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감소하면 발동되는 특별수입제한조치(SSM)의 요건을 계속 고집했다. 보조된 미국 농산물이 자국 시장에 밀려오면 6억 명에 달하는 농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울 것임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미국은 개도국의 요구대로 특별품목을 인정한다면 무역규모의 95%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로드맵이 사라진 협상

호주를 빼 나머지 4개국은 미국의 신축성 부재가 결국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U, 일본, 인도가 시장접근 분야에서 양보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은 보조감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G6 회의의 결렬로 거의 5년 동안 지속된 DDA 협상이 갈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됐다. 올해 12월 말로 위임된 협상타결 시한은 사실상 로드맵에서 사라졌다. 2007년 7월로 종료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협상권(TPA)을 감안해 설정한 협상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WTO 체제는 1995년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도 1990년 12월에 교착상태에 빠졌다. 당시 WTO 전신인 GATT의 사무총장 던켈(Dunkel)은 회원국들의 위임을 받아 정체된 협상을 진척시키면서 1년 뒤인 1991년에 이른바 '던켈 초


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에 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에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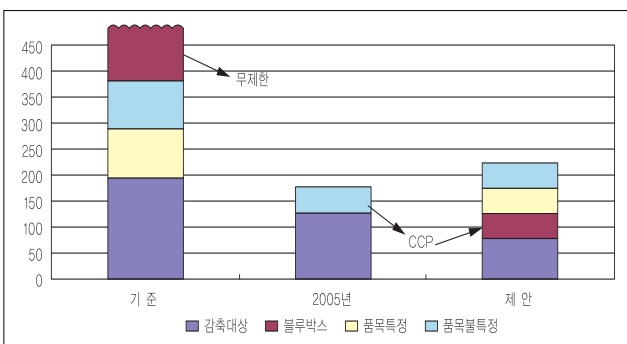
그러나 라미(Lamy) 사무총장이 이끄는 지금의 WTO 체제는 UR 때와 다르다. 미국과 EU의 양강 구조가 브라질과 인도처럼 영향력 있는 개도국이 참여하는 다자 구조로 변하면서 개발 라운드의 정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라미 사무총장 자신도 협상 초안을 만들만큼 회원국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협상 중단 의 의미와 전망

오는 11월의 미국 중간 선거, 2007년엔 미국의 TPA 종료와 새로운 농업법 제정 및 프랑스의 대선, 2008년에 미국의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2008년 이후에나 DDA 협상 종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DDA 협상은 빠르면 이번 3분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G6이 나서서 이견을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DDA 협상 타결의 지연은 '지금 그대로'를 뜻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농업보호 수준은 더 큰 폭의 감축 압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이대로라면 농업보조에 대한 WTO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브라질의 제소로 WTO 판결에서 패소한 미국의 면화보조가 이를 잘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2007년에 제정될 미국 농업법의 향방이 주목된다.

WTO에서 이루지 못한 수출 증대의 기회는 FTA와 같은 지역협정에 의해 보충될 것이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와 FTA 수립에 세계의 관심이 커질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과 영구적인 정상 무역관계(PNTR)의 수립, 우리나라 및 말레이시아와 진행하는 FTA 협상 타결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구조개혁형 농정추진과 마을영농 활동사례

일본은 '구조개혁형' 농정을 추진 중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가에 한정하여 국가의 지원을 집중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농업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한 요건이란 개별경영체의 경우 경영규모 4ha 이상이며, 마을단위의 30호 내지 50호 정도의 조직경영체인 마을영농의 경우는 20ha 이상이다. 우선 개별경영체를 구조개혁형 농정의 대상으로 하되, 개별경영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립할 수 없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한개 또는 수개 마을단위의 조직경영체를 육성한다는 의도이다.

즉, 마을영농은 지역자원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인정받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경영체이다. 마을영농은 마을이나 지역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참여 농가가 공동 출자를 하여 설립된다.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본 정부도 이러한 조직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배경은 다양하다. 지역의 후계자 역할을 하는 개별경영체가 없기 때문에 마을영농을 설립하여 후계자 확보를 도모하는 마을이 있다. 또한, 마을영농의 도약을 목적으로 기존의 농작업 수탁 조직을 법인화하는 마을도 있다. 그리고 생산대책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면서 지역비즈니스의 주체로서 마을영농을 설립하는 지역도 있다.

마을영농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역농업이나 농지의 유지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방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많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각각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농업생산을 비롯하여, 농산물 판매나 가공, 나아가 농가식당 경영이나 도농 교류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확대하는 복합경영형 법인도 출현하고 있다.

작업수탁과 농산물가공 등 다양한 활동 전개

지역사례를 통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농사조합법인 '애그리 오끼' 사례이다. 교토부(京都府) 후쿠치야마시(福知山市) 오끼(興) 마을에 위치하며, 2002년 8월 마을의 54호 전체 농가가 출자하여 설립, 2003년에 법인으로 등록하였다. 조직은 조합장과 이사(2명) 등 3명이 주로 활동하며, 농기계 운전자는 비상근으로 확보하고, 농작업은 시급 800엔 내지 1,200엔에 마을 고령자나 여성 등을 시간제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쌀 생산과 생산조정 전략으로 두류와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마을의 논 28ha 중 22ha를 경작하고 있으며, 논은 단지화되어 있어 쌀 생산비가 매우 낮다. 쌀 농업에서 교토부 평균은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43시간, 조수입 13만 2,900엔,

생산비 15만 3,200엔으로 적자이다. 이 조직의 경우, 노동투입 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하며, 조수입 11만 300엔, 생산비 8만 8,700엔으로 흑자경영이다. 채소는 적자이지만 앞으로 교토의 다양한 전통품목으로 확대하고, 가공부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이누칸노' 영농조합(犬甘野 營農組合) 사례이다. 교토부 카메오카시(龜岡市) 이누칸노 지구에 위치하며, 표고 300m에서 500m까지의 산간마을이다. 이 조합은 3개 마을을 포함하는 조직체로서 1988년 설립되었다. 참여하는 농가는 70호 정도이다. 조직은 조합장과 부조합장(3명), 생산부(4명), 직매부(4명), 여성부(6명) 등이다. 당초 쌀 농작업 수탁과 메밀·채소 등의 생산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에서 출발하였으나, 1994년 가공시설과 식당 설치를 계기로 가공·판매부문을 도입, 흑자경영으로 전환하였으며, 최근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다.

현재의 조합장은 전자회사에 근무하다 20년전 귀농,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쌀은 조합 상표로 인근 백화점과 양판점 등에서 10kg당 4,500엔에 판매하고 있다. 2,200엔에 출하하는 농가와 대조적이다.

향후 고령화 등에 대응한 비즈니스 기회확대

셋째, 유한회사 '타나센' (棚千) 사례이다. 교토부 난탄시(南丹市) 미야마정(美山町)에 위치하며, 1999년 마을의 28명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조직은 대표와 이사(4명), 구매부, 농사부, 복지부, 총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쌀·보리·메밀 등의 농작업 수탁, 식품·일용품·농업자재 판매, 지역농산물 판매, 도농 교류 등이 주된 활동이다. 이 법인은 농협 합병으로 인한 생활용품 구입에 애로가 발생하자 지역주민이 법인을 설립, 식품이나 농업자재 등의 판매를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지관리나 작업수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 작업원이나 기계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동구매차량을 구입하여 지역순회 판매를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과 고령자의 안부확인 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마을영농은 농작업 수탁에서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판매, 도농 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개별경영체가 존립하기 어려운 중산간지역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조직도 있지만, 농지를 비롯한 지역자원의 보전과 활용 등 공익적 역할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정부는 2007년부터 실시되는 품목횡단적 직불제의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곤 연구위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주요내용

황 의 식 연구위원

농협법 부칙(제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30일에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방안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농협 계획안을 바탕으로 농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경분리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여 추진한다.

신경분리 7.8조원 자본금 추가 필요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신경분리 추진계획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먼저 중앙회 사업체제 모델에 대해서는 현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첫째는 사업은 하지 않고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농정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회이고, 둘째는 신용사업연합회 조직, 셋째는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사업연합회이다. 회원농협은 중앙회의 조합원만 되고, 중앙회가 지주회사가 되어 단독으로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에 출자하는 체제이다.

이와 같이 3개 조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추가로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본금 산출을 위해 내부계정을 상계하여 현재 각 사업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순자산에 확정하였다. 그 결과 총 순자산 7조 2,600억 중 교육지원사업에 3조 1,600억, 경제사업부문에 2조 700억, 신용사업에 1조 400억을 분배한다.

다음엔 사업별로 필요한 추가 자본금을 산정하였다. 먼저 경제사업부문은 적자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적자분(1,500억 원)에 대해 연 3.5% 할인율을 적용하여 필요자본금을 산출하여 추가로 4,400억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사업부문은 자기 자본비율(BIS) 기준 10%의 자기자본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3,400억의 자본금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한다. 교육지원사업 적자는 향후 신용사업 수익을 이체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자본금 7,300억에 추가

로 7,800억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만 조직분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 추가 자본금 7,80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정부지원이 없이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적립하여 조달한다면 15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외부출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지만 이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배제하였다. 필요한 자본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15년 후에 신경분리가 가능하다는 제안이다.

신경분리가 조합원 및 회원조합에 어떤 실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실익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실익분석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적용되었는가는 견해차이가 많다.

다양한 형태에서 실익을 분석하여 사업의 수익성, 전문성 등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회원조합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조합과 관계,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경제사업의 위축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조합원 농가 및 회원조합에 실익이 없고, 사업체제 개선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다.

신경분리 실익 없다는 분석결과 제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계획에서는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은 크게 산지유통부문, 도매 및 가공부문, 소매부문, 그리고 자금지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산지유통부문에 대해서는 선도조합 402개를 집중 육성하고 시군단위 연합마케팅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5년까지 선도조합을 중심으로 700억의 자금지원을 한다. 미곡에 대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시군단위로 100개로 통합한다. 축산에 대해서는 1만명의 핵심조합원을 육성하고, 30개의 통합브랜드를 구축하면서 권역별 축산물도매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경제사업 활성화 적극 추진

도매유통 및 가공사업을 혁신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매유통 본부를 강화하여 산지-소비지 연계를 강화한다. 종합유통센터 및 도시농협의 하나로마트 농산물을 통합구매하고, 연합마케팅조직을 하부 산지출하조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의 공판장 사업에서는 정가수의매매를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마케팅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NH식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자본이 많이 드는 사업은 직접 투자함으로 목우촌의 축산가공사업을 강화한다.

이번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소비자 유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2015년까지 300억을 투자해 대형소매장을 37개 확대하고, 도시농협에 규모화 된 하나로마트를 375개 확장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에 1조의 지분투자 참여를 통해 우리 농산물 취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는 2015년까지 1300억의 자금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한다.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0억의 자금지원규모를 700억으로 확대한다. 중앙회 사업에 600억을 신규로 투자해 소비자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한다. 조합 자금지원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타당성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적절하고, 효과적이기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농림부는 계획의 적합성, 추진 가능성, 추가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R**

“수해 복구 위해 구슬땀 흘려” 강원도 횡성에서 용수로 복구



우리 연구원은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횡성군을 찾아가 용수로 복구사업을 도왔다.

우리 연구원은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오세익 부원장을 비롯 32명의 직원들이 7월 25일 강원도 횡성으로 향했다.

이번 수해지역 일손돕기는 지난 폭우로 심한 피해를 입은 횡성군 우천면에서 이루어져 망가진 용수로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였다. 수해 복구에 참여한 직원들은 횡성으로 향하며 강원도 지역 곳곳이 폭우로 인해 폐허가 된 현장을 목격하고 한시바빠 복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수로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여 성금을 모으고 있다.

호우 관련, 채소·과채 속보 발간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채소와 과채 속보를 발간했다.

채소관측팀은 강원도 지역 집중 호우로 인해 7월말에 대부분의 채소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오이는 평년대비 출하량이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료는 홈페이지(www.krei.re.kr)에 게시되어 있다.

바코드 이용 도서 대출

자료지원팀은 개원 이래 사용해 오던 대출카드를 없애고 7월 1일자로 바코드

를 이용하여 도서를 대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대출시 기록 등의 불편함을 없애고 신속하게 대출, 반납, 배열할 수 있게 되어 대출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구진 대외활동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7월 24일 농특

위 주최로 열린 농업·농촌기본법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7월 6일 이인기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FTA 토론회에서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24일은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한-멕시코 경제협력세미나에서 ‘한-멕시코 FTA와 농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기환 선임연구위원은 세계농촌사회학회 이사회 및 학회 참석을 위해 7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가 7월 26일 귀국했다.

△김영훈 연구위원은 7월 19일 진주산업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북한농업 현황과 농업협력’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정민국 연구위원은 7월 20일 연암축산대학에서 창업농을 대상으로 ‘축산업동향과 향후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7월 27일 경상대학교 농식품마케팅연구교육센터에서 ‘농산물 공동계산 추진효과와 방안’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자료정보지원실과 기획조정실 농촌 현장연수



자료정보지원실은 천안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현장연구 강화와 고객의 연구수요파악을 위해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정보지원실은 7월 10일 충남 천안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참나무사슴농장과 시설오이를 재배하여 유통하는 사이버농장을 찾아갔다.

참나무사슴농장은 생산물의 60%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고 있으며 리콜제까지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시설오이를 재배하

는 봉황농장은 대부분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하고 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은 7월 14일 축산연구소 대관령지소 한우시험

장과 대관령원협 산지유통사업소를 방문했다. 대관령 한우시험장은 한우의 우수 품종 육성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역점을 두어 연구를 하고 있다.

대관령원협 산지유통사업소는 조합원들로부터 농산물을 사들여서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세척·포장을 하여 대관령의 청정 상표(Sky Village)를 부착, 유통하는 등 활발하게 경제사업을 펼치고 있다.